



연구 요약



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사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수행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약함. 즉,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 촉진 사업들을 수행 중에 있으나 그 기대효과는 낮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1).
-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 장애인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원하는 구직희망자는 약 18,000명(9.7%)으로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자립생활이 시급함. 2021년 1/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장애인 구인수 대비 구직자수의 구인배수는 0.8배수로 전국 평균 1.3배수에 비해 0.5배수 낮아 지역 내 구인 사업체 등 일자리 개발이 보다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음. 장애인의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기준은 3.1%로 전국 2.91%, 경상남도 3.07%이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은 3.4%로 전국 3.0%, 경상남도 2.74%로 저조함(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 이에,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 및 고용정책 및 전략 개발을 위한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함. 즉, 장애인 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 내 상호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전담 기관 설립의 필요성 확인과 운영방안을 마련, 제안하는 것임. 경상남도 장애인의 일자리 환경 분석과 우리나라 범부처 장애인 일자리 전달체계의 고찰, 국내외 사례 분석,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취업지원 관련 전담기관인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 방법

- 문헌연구로는, 중앙정부 부처별(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애인 일자리 취업지원 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선점 파악,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취업지원 현황 분석을 함.
- 사례분석으로, 국내에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국외로는 일본을 고찰함.
- Q방법론 조사로는, 경상남도 장애인 관련 기관 사회복지사 35명에게 도내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함.
- 초점집단면접(FGI)으로는,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취업지원 실무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취업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및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인식을 조사함.
- 설문조사로는, 경남 도민 15세 이상 장애인 306명을 조사함(취업자, 취업희망자(실업자), 취업전준비자(비경제활동인구). 조사내용은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현황, 지원수준, 지원서비스 인식도·이용도·만족도, 센터 설립 필요도, 센터 주요기능과 프로그램 참여의사, 운영조건 등을 조사함.

□ 연구 결과

1)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환경 분석 결과

- 장애인의 연령, 장애정도, 지역 격차, 의무고용률 준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취업지원 방안 마련과 전담기관 필요.
 - 경남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7.2% 수준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으며,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이 10% 이상 지역이 합천군, 의령군,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임. 장애인은 65세 이상이 50.4%로 고령화되고, 중증장애인이 37.5%임. 장애인 고용률은 35.3%(전체 고용률 59.0%)로 23.7%p의 격차가 큰 편임.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조례의 의무고용률 확대에도 기준 규정을 미준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 경기도 조례와 같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 필요함.

2) 장애인 일자리 운영체계 분석 결과

- 장애인 일자리 운영제도 및 전달체계 측면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즉 통합운영체계 구축이 필요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및 네트워크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중임. 지방정부 또한 부처별 사업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중앙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남.

3)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간접사업 운영과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취업 유지를 위한 생활지원 등 통합지원 필요
- 서울시장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는 취업알선 등의 직접사업 수행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간접사업 수행. 자체 장애인 일자리 정보망 플랫폼 구축, 공공일자리 확보와 민간일자리 개발 총괄 수행. 취업실적 목표량의 현실화, 예산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과정의 이해 제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 직무평가 양성과정 개설·운영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함.
- 부산시장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는 직접사업에서 간접사업(일자리 연계·개발·지원)으로 전환 중임. 부산경제진흥원의 장애인 일자리 정보망 시스템 구축·관리 지원으로 구인구직 이용자 웹사이트와 취업이력DB관리, 직업능력평가센터 역할, 일자리 개발·보급과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수행. 네트워크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노력(역할 협의)을 통한 센터 정체성 확립과 이에 따른 조직·예산·인력·사업 확대와 홍보 등을 제시함
- 서울, 부산의 공통된 경남지역의 선결 사안으로는 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보장, 공단 경남지사는 사업체(민간일자리) 개발 및 사후지도 연계와 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 발굴 및 일자리 개발(공공일자리) 연계 운영, 민간법인보다는 공공기관(사회서비스원)에서의 운영 효율화 제고, 취업지원 시스템은 공단·개발원 및 부산경제진흥원 시스템 연계 활용을 추천하였음.

- 일본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둔 장애인 고용정책 (‘공조, 공생사회 만들기’)을 추진함. 후생노동성(후생성=복지부+노동성)으로 통합되어 동시에 복지·고용 지원이,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공공직업안정소 (=고용센터), 지역장애인직업센터,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복지·교육 연계 및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4)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 (Q방법론조사 결과) 통합지원센터 필요성 인식유형 3가지를 도출함. 민간과 공공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민관 협업 일자리 보장형’,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일자리 보장형’, 일자리 연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기적 연계 일자리 보장형’ 을 도출함.
-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첫째,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서비스 **문제점**으로는, ① 전달체계 밀집지역의 유사·중복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 불균형 ② 기관 간 취업실적 경쟁으로 교류 연계 최소화 ③ 구인사업체와 구직장애인 미스매치 ④ 자체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⑤ 기관별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인식함. 둘째,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서비스 **개선방안**으로는, ① 법적 근거 통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및 연계지침 마련(연계협력 역할 명확화) ② 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지원 및 취업실적 공동인정연계 ③ 범부처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활용 및 스마트폰 앱 연동활성화를 제시함. 셋째, **센터 설립시 경남에 미치는 영향** 기대로는, ①(제도적 측면) 취업지원 서비스 진입 창구(Gateway) 역할로 개별화고용계획사업 추진 ②(전달체계 측면) 네트워크 총괄자로서 확대되는 연계 기관 중재·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③(일자리 측면) 취업실적 위주 직접사업 보다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간접사업 수행 ④(이용자 측면) 지속적인 취업지원 사례관리 수행 ⑤(기관 측면) 지역별 전문 인력 배치 및 각 기관 홍보, 구인구직 통합정보 제공임. 넷째, **센터 설립시 선결 사안** ①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유지 안정화 ②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확대 운영이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취업자의 경우, 과반수가 정부재정지원일자리에 고용, 고용 형태는 임시 임금근로자가 52.5%, 상시 임금근로자는 40.6%였음. 취업경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이 37.6%, ‘지방자치단체’ 2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8% 순임. 취업할 때 도움된 것은 ‘일자리 채용 관련 정보파악’ 37.6%, ‘경력’ 17.8% 순임. **취업희망자(실업자)**의 경우, 이전 직장 형태는 ‘일반사업체(임금근로자)’가 22.3%로 가장 많았으나 장애문제와 근로문제(저임금, 근로조건·환경)로 퇴사함. 희망직장(일자리) 형태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 26.2%, ‘직업재활시설’ 22.3%, ‘정부 및 공공기관’ 21.4% 순임.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30.9개월로 구직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취업알선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함. 구직활동경로는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5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8.2%, ‘지방자치단체’ 7.8%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홍보가 필요함. **취업준비자(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비경제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공부’가 52.0%로 가장 많았고, ‘아무것도 안 함’ 20.6%, ‘취업준비’ 18.6% 순으로 조사됨. 대다수가 구직의향(80.4%)이 있었으며, 희망 고용형태는 ‘임금근로(93.9%)’였고, 희망 직장(일자리) 형태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 29.9%, ‘일반사업체(임금근로)’ 22.1%, ‘직업재활시설’ 18.2% 순으로 취업희망자(실업자)와 달리 일반사업체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음.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으로, 경남도 내 장애인 일자리 지원수준(5점 척도)은, ‘부족하다’가 43.8%로 가장 높음. 경남도 내 장애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기관 인식도는, ‘장애인복지관’ 89.9%, ‘경상남도교육청’ 64.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2.7%, ‘장애인단체’ 60.1% 순인 반면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학교’, ‘중소벤처기업청’,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전반적 인식도가 50.0% 이하로, 이들 기관의 인식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함. 아울러 제공기관 이용도는, ‘장애인복지관’ 7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6.6%, ‘경상남도교육청’ 42.2%, ‘장애인일자리사업’ 32.5% 순으로 조사됨. **경상남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필요정도**는, 대부분이 ‘필요하다(93.4%)’고 응답하였음. 센터의 필요 이유로는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66.4%, ‘고용기회가 부족하여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16.8%, ‘개인의 노력으로 일자리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7.0%로 대부분 일자리 획득을 위한 정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함. **통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5개 영역 모두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일자리 연계’ 89.0%, ‘일자리 지원’ 86.9%, ‘일자리 개발’ 86.2%, ‘취업지원특화사업’ 85.8%, ‘일자리통합지원서비스 정보망·플랫폼 구축’ 85.6%). **통합지원센터의 꼭 필요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서비스**로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28.6%, ‘경상남도 내 구인구직 정보통합관리 및 정보안내’ 18.3%, ‘기관 간 개인정보(상담기록, 직업평가 결과 등) 연동’ 13.4% 순이었음. **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개설 참여 의향**으로는, 대부분 참여의향(94.5%)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통합지원센터가 갖추어야 할 운영조건**으로는, ‘안정적 운영예산 확보’ 38.8%, ‘민간과의 협력관계’ 29.4%, ‘전문인력 충원’ 21.1% 순으로 조사됨.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필요 여부로는 ‘필요하다’ 가 75.9%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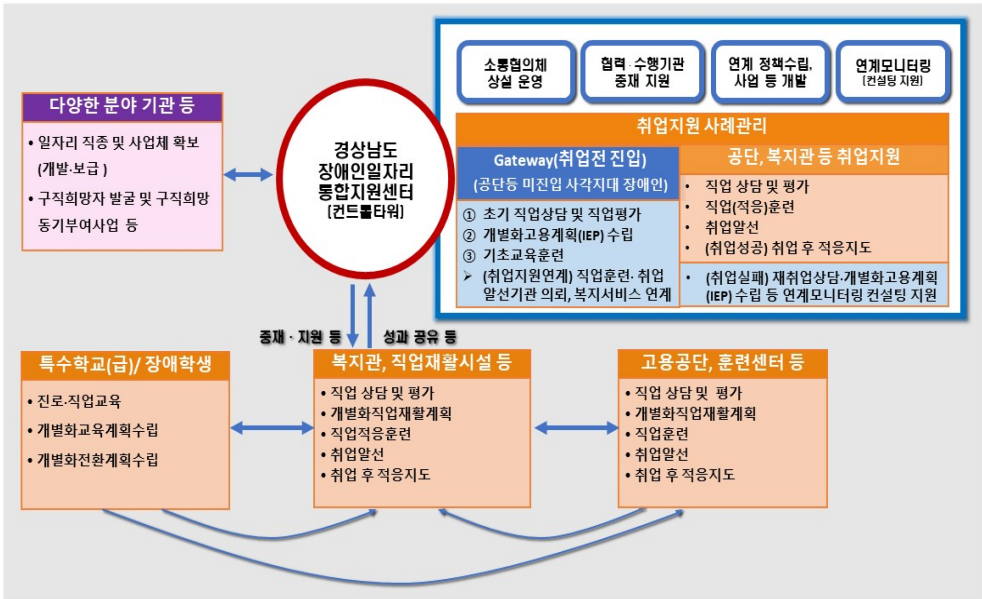
□ 정책제언

-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산하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일자리 취업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표 6-2〉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취업 통합지원 개선방안

구분	증상정부	경상남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컨트론타워)	사회서비스원 (협력지원)
법제도	1) 부처 간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시스템 안정화 위한 법 제도적 정비 2) 장애인 개별화고용지원계획 수립 위한 법 제도적 기반 정비 3)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 확대와 장애인 고용 의무 책임성 강화	1) 경상남도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통합지원서비스 위한 조례 제정 2) 경상남도 장애인 고용의무 책임성 강화	1) 조례 근거한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1)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발전적 개편 2) 취업지원 서비스 피의 제고를 위한 지자체 중심 컨트론타워 설치	1)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컨트론타워 설치운영 2) 장애인 일자리 소통하여 네트워크 구축운영	1) 협력체계 구축 2) 지원체계 구축 3) 개발체계 구축 4) 전문체계 구축	1)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비용 절감 및 효율적 운영)
서비스 내용	1) 개별화고용계획 수립 및 AI 데이터 기반 취업지원 통합사례관리시스템 강화 2) 연계 통한 지자체 중심 취업지원 시범사업 계획 수립 추진 3) 취업지원 연계 실적인정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	1) 취업지원 시스템포털 이용환약 통한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정보망" 구축 2) 경상남도 고용추진 및 직업재활사업 등 계획 수립 3) 경남 장애인 일자리 취업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1) 협력체계 구축(5) :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경쟁 보강 구축(연계시스템포털 이용환약), 소통형 의제 네트워크 구축, 연계지침 마련, 장애인 일자리 포럼 개최, 장애인 일자리 인식개선 캠페인 및 취업박람회 운영 2) 지원체계 구축(4) : 수행협력기관 지원 및 실적 인정연계 찾아가는 "이동 장애인 취업 탄탄대" 운영, 직업생활양성 지원, 취업예비 발간내포 3) 개발체계 구축(6) : 연계협력률 통한 정책수립 연계협력 사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신규 일자리 개발, 보급, 구직희망자 발굴 및 동기 부여사업 추진, 장애인 일자리 및 취업 실태조사 장애인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보급 4) 전문체계 구축(5) : 개별화고용계획 수립 등 게이트웨이 관리, 지속적인 취업지원 사례 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연계 모니터링단 구성 및 컨설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지원 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업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지원 3)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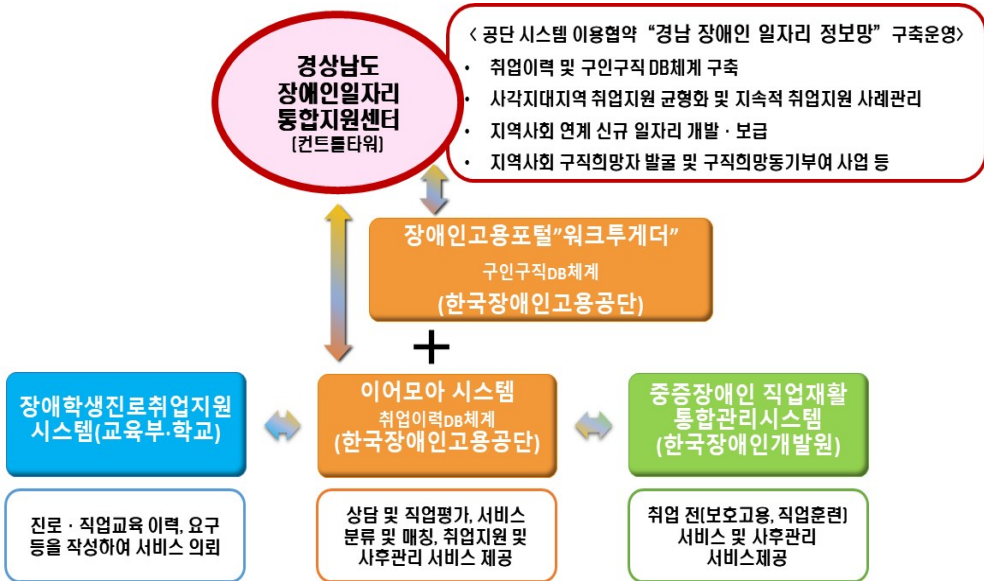


출처: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이혜경 외, 2018), 교육-복지-고용 데이터 연계 전달체계 구축 참조 재구성함.

○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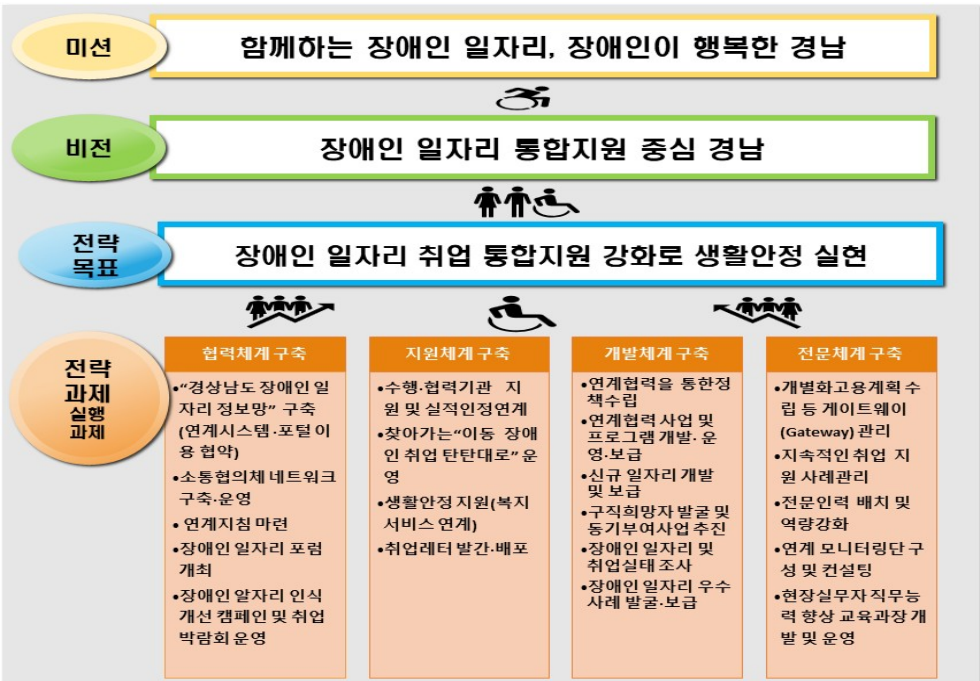
- **소통협의체 상설 운영**
 -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협업과 연계 지원
- **협력·수행기관 중재 등 지원체계 구축**
 - 서비스 중재 및 조정
 - DB관리 및 통합정보 제공·연계(취업이력 및 구인구직 DB관리, 일자리 매칭)
- **연계 통한 정책수립 및 사업·프로그램 등 개발체계 구축**
 - 경상남도 고용촉진·직업재활 정책수립 노력과 연계협력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
 - 신규 일자리 직종 및 사업체 개발·보급
 - 사각지대 구직희망자 발굴 및 비경제활동 장애인 구직 동기부여 제공
- **협력·전문체계 구축 및 지속적 모니터링**
 - 영역 협력기관 협약 추진 및 연계협력 지침 마련(역할 합의 및 명확화)
 - 개별화고용계획사업 추진(게이트웨이 관리) 및 지속적인 취업지원 사례관리
 - 연계협력 사업·프로그램 시범운영(인큐베이팅)과 지속적 모니터링(컨설팅 지원)

○ 연계시스템·포털 이용협약 “경남 장애인 일자리 정보망” 구축·운영(안)



○ 경상남도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 미션, 비전, 전략목표, 추진전략(4) 및 실행과제(20)는 다음과 같음.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계획, 재정운영계획 제6장 참조